



무한의 위험 책임

성계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 한양대 원자력공학 학사
- KAST 원자력공학 석사, 박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원자력 안전학교장
- 가동원전규제단장
- 심사단장
- 부원장

- OECD/NEA 원자력규제위원회 (CNRA) 한국대표(15~)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2016~)

그년 7월17일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
 ㅁ가 승용차 5대를 추돌해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또
 10월 13일에는 울산시 언양읍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는 화재가
 발생해서 10명이 사망했다.

이 두 사건을 놓고 전세버스 운전사의 자격 요건을 놓고 우리 사회가 뜨겁
 다. 봉평터널 사고 운전자는 2014년 음주운전 3회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올해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해 근무했고, 울산 버스사
 고 운전자는 그동안 총 12건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세버스를 몰았나하는 생각에 국민은 격분하
 고 있다. 이들에게 안전운전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안전불감증의 과오

예측되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안전불감증이다.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 착오는 곧 닥칠 위험을 전혀 예상하지도 대처하지도 못하게 된다.

1970년대 포드사의 '핀토'라는 차는 뒤에서 추돌하면 연료탱크가 쉽게 폭발
 해 500여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화상을 입었다.

포드사는 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연료탱크를 고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안전에 투입되는 비용을 경영논리로만 분석했던 포드사는 회사가 존폐의 위기까지 몰리는 홍역을 치러야 했다.

1986년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추진제 연결부의 결함을 알고도 발사를 강행해서 폭발하고 말았다. 2003년 콜럼비아호는 연료탱크에서 단열재가 떨어져 폭발했다.

안전보다는 성공의 기대치에 무게를 둔 의사 결정, 유사한 문제들을 몇 차례 넘기면서 생긴 내성으로 발생한 사고였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 집단인 NASA도 안전불감증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장 제일주의 풍토에서 안전을 살피는 일은 비용만 낭비하는 것으로 치부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비용과 투자 없는 안전은 포호빙하(暴虎馮河)에 불과하다. 범을 맨손으로 두드려 잡고, 큰 강을 배 없이 걸어서 건너는 것처럼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만용일 뿐이다.

NASA의 예에서 보았듯, 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의사 결정은 안전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돼야 한다.

포드사처럼 안전 비용을 대차대조표의 테이블에 올려서도 안 된다. 안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우선시 돼야 하는 최고의 가치여야 한다.

안전문화가 가치관으로 정착되어야

안전에 필요한 비용은 선택이 아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심을 위한 필수 비용이다.

안전 기준과 점검이 강화된 시설, 기계, 장비 등의 하드웨어는 물론, 정부의 정책과 제도, 사회의 정의와 문

화, 개인의 의식과 행동 등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장착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안전문화는 기존의 의식, 행동의 변화를 통한 국민 생활 전반에 안전 태도와 관행 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안전 시스템 혁신과 함께 모두는 각자 위치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안전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학계에서 19세기까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한 손해에만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됐다.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누군가가 손해를 입어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산업 사회가 고도로 발전한 20세기에 들어와서 국가와 사회가 인정한 허용 위험 영역 내에서 구체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이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사회 정의와 공평성에 입각한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무한의 ‘위험 책임’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고의나 과실 없이 오염원이 누출된 사고에 의한 피해 배상과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사고 운전자 외에 사고 유발을 방치한 버스회사의 책임자에게 묻는 것이 무과실 책임주의다.

원자력산업의 경영자와 종사자 모두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책임 한계가 없는 무한책임자들이다.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 착오도, 예측되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한 원자력 국가’를 만드는 규제의 최일선 책임자로서 필자 역시 안전문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과실의 유무를 불문한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한 ‘위험 책임’을 절감하게 된다. ☺